

# “행정통합은 특별시급 지위” 김영록 지사, 지역민 설득 나서

도의원 의원총회 참석 주민설명회  
주민투표 아닌 도의회 동의로 추진  
2월까지 시·군·구 순회설명회 개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도의회와 지역민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주민들의 대의 기관인 전남도의회 의원들 앞에 직접 나서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주민투표가 아닌 도의회 동의로 못 박고 다음달까지 전남 22개 시군은 물론 광주 5개 자치구를 찾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의원 의원총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일단 9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지역국회의원 간담회를 지켜본 뒤 18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문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전남 상

생의 불거고 트였고, 정부가 부여하겠다는 여유 가지 과감한 재정 행정 권한 인센티브를 받아 AI에너지 수도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통합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 만큼,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 기본 골격을 빨리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통합 주간기획단을 설치했고, 앞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주간협의회를 민관 합동 실무 기구로 두고, 자문기구로 많게는 500명 규모의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주간협의회도 구성해 기본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관건은 특별법 제정 시기라면서 민주당이 1월 16일 법안 발의 후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함께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 이후 다음 주 경 도의원들과 만나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오는 2월까지 시·군·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가름하겠다고 밝혔는데, 빠른 통합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동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도의원들에게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22개 시군 체계가 유지된다는 점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석수 역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도의원 의석수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조정하겠다는 건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지방선거에 (시도의원 의석수는) 험행 선거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법에 담아야하지 않겠나”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서도 올 가을이 통합의 가장 좋은 시기”라며 “과거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을 유치한 바 있어, 통합을 통해 이에 준하는 큰 행정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우선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 시·도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불거진 우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소를 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통합으로 조직권을 부여받고 필요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중복 우려 해소가 가능해 공무원들의 불안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내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영록(오른쪽)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목포·무안·신안 통합도 병행해야

주민연대, 전남 소지역간 통합 건의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서 전남 소지역 간 통합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목포무안신안 선(先)통합 추진 주민연대’는 8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와 함께 ‘목포무안신안 통합’도 병행해 줄 것을 건의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남 서부권으로 분류되는 목포와 신안, 무안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본격적인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라며 “광역 행정통합과 함께 목포와 무안, 신안의 통합을 병행해 지역 30년 숙원인 ‘무안반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와 광역자치단체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여년 전부터 지속돼왔다. 2023년엔 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자치단체장 임지자들도 통합 ‘카드’ 끼니들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세 지역 주민이 무안반도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대규모 혜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 서부권은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무안군의 통합국제 공항 유치에 따른 정부 혜택, 전남 대표 도시인 목

포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소멸 탈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을 발판으로 지역 민의 오랜 숙원인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해 AI데이터센터, RE100산단지 유치,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혁신밸트의 핵심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계기로 3개 지역 기초의회 동의 혹은 주민동의를 거쳐 통합이 가능한 법적제도를 선행적으로 마련해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도 3개 지역 주민들의 힘과 역량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청와대에 쓰린 눈

▶ 1면에서 계속

이 모든 계획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시도는 1월 중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고, 2월 임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초단기 스케줄을 잡고 있다.

물리적으로 2월 통과는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능에 기깝다. 이번 9일 회동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으로서 특별법 통과를 결의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어야 한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번 회동에서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국 체계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으로 2월 통과는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능에 기깝다. 이번 9일 회동에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으로서 특별법 통과를 결의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어달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간협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간협의회”로 표기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다했다. 선언문 4항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lt;p